

#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 차 례

1. 개요
2. 주요 이슈별 정책
3. 유럽 주요국의 평가 및 대응
4. 전망

## 주요 내용

- ▶ 美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이슈에서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계 재건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일부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유럽 관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상존함.
-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이슈별 정책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통상·산업] ①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21%' 제안 및 WTO 개혁의지를 통해 EU와 협력 기대  
②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EU 추가관세 결정을 일부(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유지함에 따라 미·EU 간 통상갈등 상존
  - [기후변화·환경]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미국은 EU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외교·안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대중국 인식을 갖고 있으나 견제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여, EU와의 정책공조는 사안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
- ▶ 독일, 프랑스, 영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협력 강화 및 관계 회복을 희망하나, 양국간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존재함.
  -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및 유럽 내 안보분야의 높은 대미국 의존성,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 및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등에서 각각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가능성을 갖고 있음.
-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유럽 관계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사안별로 미국과 EU가 서로 경쟁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달리할 것임.

## 1. 개요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규범, 기후변화와 환경, 민주주의와 인권 등 주요 다자체제 및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복귀를 선언함.

- 주요 국제협약과 기구에서 탈퇴를 결정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일방주의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임.

표 1. 미국의 전통적 역할(4개 분야)

핵심요소	주요 특징
글로벌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이슈에 대한 확인 및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도모</li> <li>• 국제 규칙과 규범의 강제</li> <li>• 국제주의적·개입주의적 외교정책</li> <li>•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외교정책</li> <li>• 자유주의적 질서·국제주의·패권을 반영한 외교정책</li> </ul>
자유 국제질서 수호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과 강제에 의한 영토변경 불인정 및 주권적 영토에 대한 존중</li> <li>• 국가간 분쟁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li> <li>• 국제법, 글로벌 규칙 및 규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li> <li>•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및 투자체제 활용</li> <li>• 국제 수역·영공·우주·사이버 공간의 국제 공유재화</li> </ul>
자유·민주주의·인권 수호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위주의적·비민주적 정부 형태에 대한 비판</li> <li>• 미국 소프트웨어의 한 부문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인권 수호 및 증진</li> <li>• 가치 공유 국가간 협력</li> </ul>
유라시아의 지역 패권 등장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라시아의 인구·자원·경제활동을 고려할 때, 유라시아 지역 내 패권 등장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힘의 집중을 초래</li> </ul>

자료: CRS(2021), "U.S. Role in the World: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R44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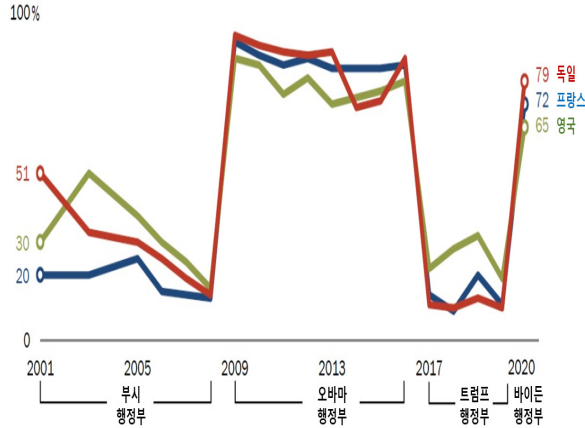
■ 미국·EU 간 새로운 대서양 협력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 내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와 기대감이 높아짐.

-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유럽의 신뢰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게 상승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기로, 독일 93%, 프랑스 91%, 영국 86%에 이르렀음.
-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10% 내외에 불과했으며, 영국은 이보다 조금 높은 1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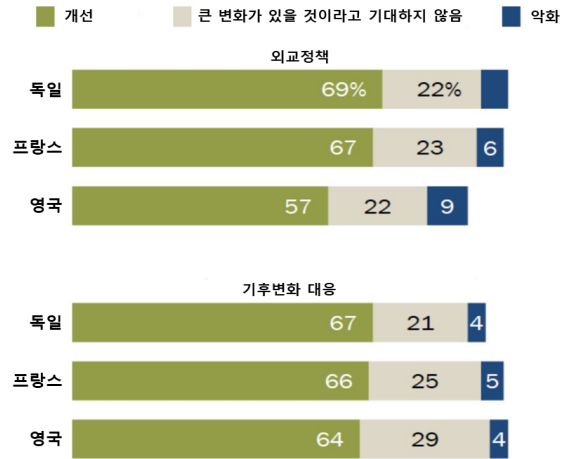
- 유럽 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EU의 이익이 보호되고, 미국이 EU와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기인함.

그림 1. '미국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신뢰도



자료: pewresear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0).

그림 2.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및 기후변화 부문 개선 가능성



자료: pewresear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유럽 대서양 관계의 잠재적 갈등요인은 상존함.

■ 본고에서는 EU와 주요 회원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EU와 미국의 관계를 전망해보고자 함.

## 2. 주요 이슈별 정책

### 가. 통상·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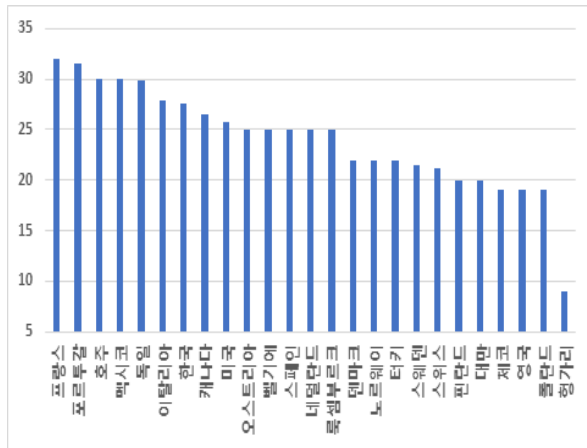
■ **[글로벌 법인세 제안]**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다국적 기업(MNEs)으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글로벌 법인세안을 제안함(2021년 4월).<sup>1)</sup>

- 바이든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원잠식 차단과 매출지 과세 원칙을 강조하는 새로운 글로벌 법인세안을 OECD와 G20 회의에 제안함.
-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1%로 제안했는데, 202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3.51%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매출지 과세원칙을 내세우며, 글로벌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안함.

1) Reuters(2021. 4. 15), "Explainer: What is a global minimum tax and how could it affect companies, countries?" <https://www.reuters.com/business/what-is-global-minimum-tax-how-could-it-affect-companies-countries-2021-04-14/>(검색일: 2021.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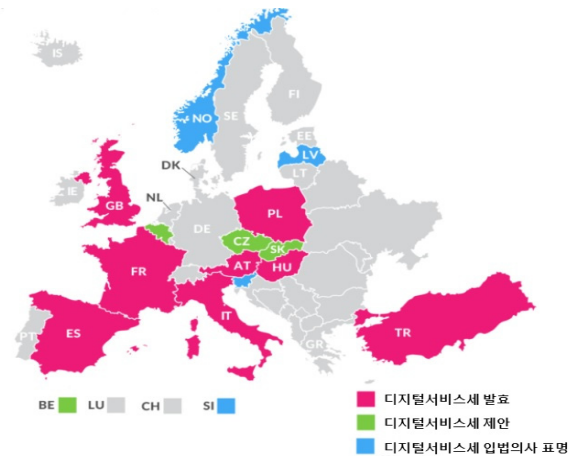
그림 3. 2020년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율

(단위: %)



자료: taxfoundation.org DB(검색일: 2021. 4. 15).

그림 4. 유럽 주요국의 디지털세 도입 현황



자료: KPMG(2021).

- EU는 미국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안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제안된 최저한세율 21%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
  - o 미국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21% 제안에 대해 EU는 역내 회원국간에도 상이한 법인세율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1%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 o 동시에 글로벌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지 법인세 납부는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대상 기업 범위 및 과세소득 차별화 논의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만 과세대상 기업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OECD 디지털세 도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 2021년 중반까지 OECD에서 디지털세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나, 합의가 실패되거나 연기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제안하고 유럽 주요국도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EU와 미국 간 통상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 o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와 영국 등이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함.

■ [WTO 개혁 논의]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WTO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WTO 다자무역체제 개혁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o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WTO 상소기구 패널 구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 등에서도 미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짐.<sup>2)</sup>
- EU도 新통상전략(2021. 3)을 통해 WTO 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협상의 효율화, 상소기구 기능 정상화, 새로운 규범 정립, 감시기능 강화 등을 주장함.<sup>3)</sup>

2) Reuters(2021. 1. 30), "Washington says it's ready to engage on WTO reform," <https://www.reuters.com/article/us-trade-wto-usa-idUSKBN29Y22R>(검색일: 2021. 4. 22).

3) EU 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 장영욱, 오택현(2021),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No. 14.

■ **[미·EU 통상 이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U와의 통상 이슈는 당분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기 보조금 문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수입자동차 보복관세 부과 계획, 미·EU 무역협정 논의 등에서 EU와 갈등을 빚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이후 계속된 미국과 EU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WTO 판결을 근거로 EU 에어버스(Airbus) 항공기 및 EU 주요국 상품에 각각 15%와 25% 등 총 75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4개월간 한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으나 철회하지는 않음.<sup>4)</sup>
- 바이든 행정부는 미·유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EU產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으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추가관세는 EU측의 강한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sup>5)</sup>
- 2018년 5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함.
- 2021년 2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은 UAE產 알루미늄에 대한 10%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바, EU에 대한 관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항공기 보조금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 관세부과 유예 결정을 환영하면서, 미국과 EU 간 통상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

## 나. 기후변화 및 환경

■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및 기후중립 목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약 재가입을 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특별대사 임명 및 백악관 내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신설 등을 담은 일련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8, 13990)을 발표함.

-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8')을 통해 다음의 정책을 발표함.<sup>6)</sup>
- 미국은 기후변화를 국가 외교·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행정명령 발표 120일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G7 및 G20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어젠다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며, 미국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4월 22~23일에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함.
- 연방 청정발전 및 자동차 조달전략을 통해 △ '35년까지 무탄소공해 전기사용 장려 △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용차량 청정·탄소 제로배출 차량 사용 △ 청정에너지 사용 및 유지를 위한 조합업무 창설 등을 제시함.
- '30년까지 해상풍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위원회의 임무를 설정하고, 공유지 및 연안에서 가스·석유 신규개발 중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 증진을 추진하며,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4) USTR(2021), Notice Regarding Periodic Revision of Section 301 Action: Enforcement of U.S. WTO Rights in Large Civil Aircraft Dispute.

5) Politico(2021. 3. 10), "Trump leaves Biden with an EU trade time bomb," <https://www.politico.eu/article/trump-leaves-biden-with-a-n-eu-trade-time-bomb/>(검색일: 2021. 4. 23).

6) Federal Register(2021), Executive Order 14008: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 또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90)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을 강조함.<sup>7)</sup>
- 정부 부처별 최근 4년간의 조치에 대하여 동 행정명령의 목적과 불합치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수렴을 통해 유예·개정·철회하도록 함: ① 석유와 가스의 메탄가스 배출 감축(석유와 천연가스 분야 신규개정 수정 배출원 재검토) ②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연비 기준 수립 ③ 고용 창출이 가능한 가전제품 ④ 건물 효율성 기준 수립 및 대기오염으로부터의 보호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s Mechanism)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sup>8)</sup>

- 바이든 행정부는 9대 정책 우선분야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함.<sup>9)</sup>
-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제로배출 달성을 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하여 EU는 2023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세(carbon pricing), 탄소관세(carbon tariff),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TS)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 특히 EU ETS의 확대 적용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EU ETS에서 무상할당(free allowance)을 받고 있는 에너지과소비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정경쟁 차원에서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내용을 두고 미국과 EU가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sup>10)</sup>

## 다. 외교·안보

■ **[다자주의 복귀]** 다자주의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주요 국제 협약 및 협정의 회원국인 EU와의 협력 회복을 기대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주요 국제 협약이나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도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체제 복귀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함.

7) Federal Register(2021), Executive Order 13990: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8) USTR(2021),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9) 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재건 ② 노동자 중심의 무역기조 ③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④ 인종 및 소외지역 포용 경제성장 ⑤ 포괄적 대중전략(노동 및 인권 포함) 수립 ⑥ 우방과의 협력 강화 및 WTO 체제 복원 ⑦ 농축산 및 수산업 육성 ⑧ 글로벌 경제변명 공동 추구 ⑨ 통상규범 및 무역협정 집행 강화

10) Financial Times(2021. 3. 31), "EU rebuffs US concerns over carbon border tax threat," <https://www.ft.com/content/d31ec6c9-453a-4705-b47b-1c9e46de817a>(검색일: 2021. 4. 22).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기후협약과 WHO 재가입을 승인했으며, UN 인권이사회 재가입 의사도 표명한 상태임.

표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다자주의 복귀

국제협약	재가입 여부	내용
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재가입	195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한 국제협약, 미국은 2015년 12월 가입 후 2017년 6월에 탈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재가입
WHO	재가입	194개국 가입, 미국은 1948년 가입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의 친중 성향에 대한 불만으로 2020년 7월 탈퇴 선언,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재가입
UN 인권이사회	재가입 시사	UN 산하 이사회, 미국은 1947년 가입, 2020년 반이스라엘 성향에 대한 불만으로 탈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가입 시사
이란핵협정 (Iran Nuclear Deal)	추가협상을 전제로 논의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이란,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EU가 핵협정 체결, 미국은 2018년 5월 탈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협상을 전제로 복귀 추진

자료: 주요 언론 발표를 저자 재정리.

- EU, 독일, 프랑스는 다자주의 협의체를 통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함.
- 이란핵협정의 경우 EU, 프랑스, 독일이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란이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과 논의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대해서 EU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함.<sup>11)</sup>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U와의 잠재적 갈등요인이 남아 있다고 평가됨.

■ [대중국 공세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중국 견제와는 달리, 전통적인 동맹국 결집을 통해 견제를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국가정보장실(U.S. Office of the Director National Intelligence)은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지역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구심을 활용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함.<sup>12)</sup>
-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홍콩 민주인사 체포, 코로나19 대응, 중국의 대만 공세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중국을 비판함.
-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대중정책은 ‘쿼드(Quad)를 중심으로 한 압박’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집단안보협의체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 및 위협 대응 협력을 목적으로 함.<sup>13)</sup>

11) NEWEUROPE(2021. 1. 21), “EU hails US return to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https://www.neweurope.eu/article/eu-hails-us-return-to-paris-agreement-on-climate-change/>(검색일: 2021. 4. 16).

12)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2021),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 EU는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Two track 전략을 추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중국 견제를 두고 미국과 EU는 사안별로 공조와 연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o 바이든 행정부는 EU 측에 중국과의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합의 선언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sup>14)</sup> EU는 2020년 12월 30일 동 협정의 합의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대중국 경제관계에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sup>15)</sup>
- o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미국과 EU는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바 있음.<sup>16)</sup>

### 3. 유럽 주요국의 평가 및 대응

#### 가. 독일

##### 1) 바이든 정부 평가

■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독일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대대적으로 환영함.

-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 후 독일 메르켈 총리는 SNS 및 2020년 11월 9일 공식성명 발표를 통해 직접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
- o 메르켈 총리는 “독일-미국 간 우정은 보물”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강조함.<sup>17)</sup>
-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독 관계는 돈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동안에는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짐.
- o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 베를린에 방문하여 메르켈 총리를 “가장 가까운 국제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미국과 독일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한 바 있음.<sup>18)</sup>
- o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를 비난(‘bad, very bad’)하면서 미·독 무역갈등이 대두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미국에 대한 독일의 신뢰가 하락함.<sup>19)</sup>

13) USIP(2021. 2. 3), “At a Time of Tests, Security Advisors Discuss Threats to U.S. and Global Security,”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1/02/time-tests-security-advisors-discuss-threats-us-and-global-security>(검색일: 2021. 4. 22).

14) Financial Times(2020. 12. 23), “Biden team voices concern over EU-China investment deal,” <https://www.ft.com/content/2f0212ab-7e69-4de0-8870-89dd0d414306>(검색일: 2021. 4. 21).

15) EU가 중국과의 포괄적투자협정(CAI)에 대한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을 당시 2022년 초까지 비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로 인해 EU와 중국이 상호간에 제재조치를 결정하면서 CAI의 비준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됨.

16) The Guardian(2021. 3. 22), “US and Canada follow EU and UK in sanctioning Chinese officials over Xinjiang,”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22/china-responds-to-eu-uk-sanctions-over-uighurs-human-rights>(검색일: 2021. 4. 20).

17) The Federal Government, “German-American friendship is a treasure we shar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merkel-us-elections-1809730>(검색일: 2021. 4. 12).

18) Reuters(2016. 11. 17), “Obama lands in Berlin for farewell visit to closest ally Merkel,” <https://www.reuters.com/article/us-obama-germany-idUSKBN13B2CJ>(검색일: 2021. 4. 19).

19) CNBC(2017. 5. 26), “Trump reportedly calls Germans ‘very bad,’ threatens to end German car sales,” <https://www.cnbc.com/2017/05/26/trump-calls-germans-very-bad-threatens-to-end-german-car-sales-reports.html>(검색일: 2021. 4. 19).

■ 바이든 대통령은 미·독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back to normalcy)’로 회귀해야 함을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을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자 경제 파트너국으로 인식하고, 미·독 관계의 재건 및 강화(rebuilding and strengthening)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sup>20)</sup>

## 2) 양자관계 주요 이슈

■ [군사]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철회함.

- 2020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을 보호하는 데 대해 독일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약 1/3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의 철수를 결정함.<sup>21)</sup>
-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독일 내 미군 철수계획이 철회되었음은 물론, 4월에는 NATO 동맹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500명 늘릴 예정임.<sup>22)</sup>
- 크람프-카렌바우어(Kramp-Karrenbauer) 독일 국방장관은 성명 발표를 통해 미군 철수계획 철회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함.<sup>23)</sup>

■ [중국] 독일은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미국의 중국 배척 혹은 고립 전략에 쉽게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독일은 2016~20년 사이 대미 무역규모 증가분에 비해 대중국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국은 5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상대국임.<sup>24)</sup>
- 2016~20년 미국과의 무역이 연평균 약 136만 유로 증가한 반면, 중국과의 무역은 연평균 약 843만 유로 증가함.
- 특히 독일이 EU 의장국이었던 2020년 하반기에 EU와 중국이 서둘러 포괄적투자협정(CAI)을 체결하였는데, 독일이 이러한 EU 기초를 이끌었던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조하기는 어려움.<sup>25)</sup>

■ [러시아] 미국은 독일이 발트해 노르드스트림 2(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産 가스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

20) African Union Commission(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inal Edition.

21) The Washington Post(2020. 6. 6), “Trump approves plan to withdraw one-third of U.S. troops from Germany,”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trump-approves-plan-to-withdraw-one-third-of-us-troops-from-germany/2020/06/05/987b2d38-a775-11ea-b473-04905b1af82b\\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trump-approves-plan-to-withdraw-one-third-of-us-troops-from-germany/2020/06/05/987b2d38-a775-11ea-b473-04905b1af82b_story.html)(검색일: 2021. 4. 19).

22) The New York Times(2021. 2. 4), “Biden Freezes Trump’s Withdrawal of 12,000 Troops From Germany,” <https://www.nytimes.com/2021/02/04/us/politics/biden-germany-troops-trump.html>; AP(2021. 4. 14), “Austin: US adds 500 troops in Germany, despite Trump pledge,”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europe-lloyd-austin-berlin-germany-201df3ddf8a2b17336c4df2cbf88ef1d>(검색일: 2021. 4. 19).

23) Reuters(2021. 2. 20), “Berlin welcomes Biden’s announcement to keep U.S. troops in Germany,”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security-usa-military-idUSKBN2AJ29G>(검색일: 2021. 4. 19).

24) DESTATIS 온라인 자료,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gain Germany’s main trading partner,”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Foreign-Trade/trading-partners.html;jsessionid=200570E11EC9AAF793DA701B3F7320FD.live721>(검색일: 2021. 4. 19).

25) Deutsche Welle(2021. 3. 26), “EU and US similar, but split on China, Merkel says,” <https://www.dw.com/en/eu-and-us-similar-but-split-on-china-merkel-says/a-57009094>(검색일: 2021. 4. 19).

-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블링컨 국무장관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노르드스트림 2를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르드스트림 2를 통한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에 대해 “유럽을 갈라놓는 좋지 않은 거래(a bad deal that divides Europe)”라고 언급함.<sup>26)</sup>
  - 3월 23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아스(Maas) 독일 외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이 노르드스트림 2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함.<sup>27)</sup>
- 미국은 노르드스트림 2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노르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기업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약 20개의 기업들이 프로젝트에서 하차함.<sup>28)</sup>

## 나. 프랑스

### 1) 바이든 정부 평가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회원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와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해 강조함.<sup>29)</sup>
  -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는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다자주의 약화, UN-NATO-WHO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 약화, 기후변화 대응 미흡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음.<sup>30)</sup>
  -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서 자유주의 질서, 다자주의, 인권 및 민주주의 보호, 기후변화 및 포퓰리즘에 대한 적극 대응을 논의함.
- 그러나 정상간 강력한 협력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이 상존함.
  -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지역 내 미군 철수계획을 검토하고 있음.<sup>31)</sup>

26)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Press Briefing - March 9, 2021,”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march-9-2021/#post-225070-NORDSTREAM2>(검색일: 2021. 4. 12).

27)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Blinken’s Meeting with German Foreign Minister Maas,” <https://www.state.gov/secretary-blinkens-meeting-with-german-foreign-minister-maas/>(검색일: 2021. 4. 12).

28) Reuters(2021. 3. 19), “Blinken warns entities involved in Nord Stream 2 pipeline to immediately quit,”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nord-stream-2-state-idUSKBN2BA2FF>(검색일: 2021. 4. 12).

29) Lowy Institute(2021. 2. 3), “France’s Macron congratulates Biden in first phone call to US president-elect,”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macron-and-biden-friends-allied-not-aligned>(검색일: 2021. 4. 15).

30) Politico(2020. 8. 28), “Macron calls on US to do more on world stage, dodges question on Trump reelection,” <https://www.politico.eu/article/emmanuel-macron-calls-on-us-to-do-more-on-world-stage-dodges-question-donald-trump-reelection/>(검색일: 2021. 4. 20).

31) Elysée(2021. 1. 19), “Vœux aux armées depuis la Préfecture Maritime de l’Atlantique à Brest,”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1/01/19/voeux-aux-armees-depuis-la-prefecture-maritime-de-latlantique-a-brest>(검색일: 2021. 4. 23).

## 2) 양자관계 주요 이슈

■ **[디지털세 도입 논쟁]**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가 2021년 중반까지 합의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프랑스는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미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출되었던 프랑스-미국 간 통상갈등이 재연될 수 있음.

- 2019년 프랑스는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를 발효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국내 매출액 2,5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에 3%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 정부는 미국 주요 디지털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매출지에서의 세금 납부라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추진함.<sup>32)</sup>
- 2019년 프랑스 정부가 파악한 미국 IT 기업의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 매출액은 구글 8%, 페이스북 74%, 마이크로소프트 73%, 아마존 58%에 불과함.
-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한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를 바탕으로 약 13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음(프랑스산 핸드백, 화장품 등에 25%의 관세 부과).
- OECD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실패할 경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EU 집행위원회도 프랑스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물론 EU 차원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sup>33)</sup>
- OECD는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할 경우 1,000억 달러의 세수손실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전쟁 등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sup>34)</sup>

■ **[안보·국방]** 마크롱 대통령은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통해 방위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트럼프 행정부가 NATO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청함에 따라, EU 회원국 중 미국과 갈등을 빚던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미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만의 군사계획인 ‘유럽개입구상(E2I: 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을 제시한 바 있음.<sup>35)</sup>
- E2I는 NATO, EU, UN 틀 밖에서 13개 유럽 국가간에 수행되는 합동 군사 프로젝트로,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해 합동훈련, 전쟁지역 내 탈출작전 지원,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군병력 투입 등을 목적으로 함.<sup>36)</sup>
- 또한 2020년 2월에 개최된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강력한 유럽군’ 창설을 다시 주장함.<sup>37)</sup>

32) 오태현(2019),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25.

33) European Parliament(2021), Report on digital taxation: OECD negotiations, tax residency of digital companies and a possible European Digital Tax(2021/2010(INI)).

34) CNBC(2020. 10. 12), “Digital tax conflicts could wipe more than 1% off global GDP every year, OECD warns,” <https://www.cnbc.com/2020/10/12/digital-tax-tensions-could-wipe-1percent-off-global-gdp-annually-oecd-says.html>(검색일: 2021. 4. 19).

35) Berlin Policy Journal(2018. 10. 15), “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 The Big Easy,” <https://berlinpolicyjournal.com/european-intervention-initiative-the-big-easy/>(검색일: 2021. 4. 23).

36) 13개 국가: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37) DW(2020. 2. 15), “Munich Security Conference: France’s Macron envisions new era of European strength,” <https://www.dw.com/en/munich-security-conference-frances-macron-envisions-new-era-of-european-strength/a-52389586>(검색일: 2021. 4. 23).

-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유럽군 창설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임.

## 다. 영국

### 1) 바이든 정부 평가

- 바이든 대통령이 EU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어 영·미 관계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양국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외교, 안보 등에서는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에 따라 ‘영국의 대세계 무역 80%에 대해 자유무역 협정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인 상황임.
  - 반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 소원해진 EU와의 관계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영국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sup>38)</sup>
  - 다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영·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sup>39)</sup>
  - 영·미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영국 존슨 총리가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는데, 존슨 총리가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임.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으로서 브렉시트와 이에 따른 아일랜드 통합 저해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sup>40)41)</sup>

### 2) 양자관계 주요 이슈

- **[영·미 FTA]** 영·미 FTA 협상에서 양국간 주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른 시일 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영국과 미국은 2020년 5월 FTA 협상을 개시하여 5차 협상까지 진행하였으나, 식품·의약품 시장 개방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미국 정권이 교체된 상황임.<sup>42)</sup>

38) NBC News(2021. 2. 13), "Britain courted Trump. The Biden era may be a more 'challenging time'," <https://www.nbcnews.com/news/world/britain-courted-trump-biden-era-may-be-more-challenging-time-n1257596>(검색일: 2021. 4. 19).

39) Brunswick, "US-UK Relations under Biden," <https://www.brunswickgroup.com/us-uk-relations-under-biden-i17574/>(검색일: 2021. 4. 19).

40) BBC(2020. 11. 24), "Brexit: Biden says no to hard border in Ireland," <https://www.bbc.com/news/av/world-55065123>(검색일: 2021. 4. 19).

41) The Guardian(2021. 4. 8), "White House expresses concern over Northern Ireland violence,"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apr/08/white-house-joe-biden-expresses-concern-over-northern-ireland-violence>(검색일: 2021. 4. 19).

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Brexit and Outlook for a U.S.-UK Free Trade Agreement,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123> (검색일: 2021. 4. 19).

- [식품] 미국은 영국의 식품위생 제도가 보호주의적 정책이라는 입장으로, 미국에서 정상 유통되고 있는 ‘염소로 처리된 닭고기(chlorinated chicken)’ 및 ‘호르몬 소고기(hormone-treated beef)’ 등의 영국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국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임.
- [의약품] 미국은 의약품시장 완전 접근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국은 의약품 가격이 국가의료서비스(NHS)의 규제를 받고 있어 무역협정이 의약품 가격은 물론 의료서비스 제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음.
- [기타] 서비스 제공, 데이터 이동의 자유 등이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음.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체결한 영·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계승 여부를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미국의 우선순위가 미·중 경쟁과 보잉사-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2023년 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함.
- 또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협정 추진 권한을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이 2021년 7월 만료될 예정으로, 협상 진행이 미국 내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43)

■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쟁]** 영국정부는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무산될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광범위한 품목에서 보복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영국이 디지털세를 실제 부과할 경우 그 규모가 약 3억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 조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44)
- 보복관세 대상품목으로 영국산 세라믹 제품, 의류, 게임콘솔, 가구 등이 포함됨.

■ **[외교·안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독자적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과 대중국 압박을 공조하는 등,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은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2020년 7월), 홍콩 사태 관련 제재 및 일부 홍콩 시민에 대한 영국 체류 권한 강화,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탄압과 관련한 대중 제재 등 미국과 공조하여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음.45)
- 영국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G7 외무장관 성명 발표(2021년 2월 3일), UN 안보리 소집 및 공동 성명 추진(2월 4일), UN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공동 주최(2월 12일) 등 미국과 공조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46)47)

43) Bloomberg(2021. 3. 26), "U.K.-U.S. Trade Deal Is Likely Years Away as Biden Shifts Focu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26/u-k-u-s-trade-deal-is-likely-years-away-as-biden-shifts-focus?sref=QbgqEltZ>(검색일: 2021. 4. 15).

44) USTR, "Proposed Action in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the United Kingdom's Digital Services Tax,"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FRNUK.pdf>(검색일: 2021. 4. 19).

45) Chatham House(2021. 3. 2), "New UK-US alignment can reshape transatlantic cooperation," <https://www.chathamhouse.org/2021/03/new-uk-us-alignment-can-reshape-transatlantic-cooperation>(검색일: 2021. 4. 19).

46)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제재 관련 주요 내용은 정재완 외(2021),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1-09 참고.

47) 영국정부(2021. 3. 26), "PM call with President Biden: 26 March 20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call-with-president-biden-26-march-2021>(검색일: 2021. 4. 19).

## 4. 전망

■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다자주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EU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 백악관경제위원장,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교통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기후위기를론자이거나,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임.<sup>48)</sup>
-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미국·EU 간 공조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
  -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미국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될 수 있음.

■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가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별로 EU와 미국이 서로 경쟁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과 EU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중 견제를 두고 EU와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가 역시 중국을 둘러싼 대서양관계의 실질적인 협력과 갈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EU와 주요 회원국은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시하면서 2021년 중반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격히 경색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EU 간 산적해 있는 통상 이슈(항공기 보조금 분쟁,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미·EU 무역협정 협상)는 직간접적으로 양국 산업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국과 EU 간 협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영 무역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정치·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존슨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경제·외교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48) The Washington Post(2021. 1. 22), "Every Cabinet job is about climate change now,"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biden-cabinet-climate-change/2021/01/21/a288a12e-5b5d-11eb-b8bd-ee36b1cd18bf\\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biden-cabinet-climate-change/2021/01/21/a288a12e-5b5d-11eb-b8bd-ee36b1cd18bf_story.html)(검색일: 2021. 4. 20).